



우리 헌법 속에 담긴 ‘과잉 민주’ 세미나

일시 2019. 1. 22.(화) 오후3시
장소 서울시 의원회관
주최  바론사회 · 자유경제포럼



■ ————— 순 서 ————— ■

■ 주제발표

- 김 학 은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토 론

- 남 정 옥 (작가)
- 여 명 (서울시 의원)
-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주제발표

헌법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9
- 김 학 은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토 론

- 남 정 욱 (작가)	15
- 여 명 (서울시 의원)	17
-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21



■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 김 학 은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헌법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김 학 은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I. 헌법`

1. 의의: 신탁계약서. (“The universal principle that government is a sacred trust of the people”) (“국민의 엄숙한 신탁”) (“백성에 의해 위탁된 권력”)
2. 목적: 개인의 자유 보호
3. 수단: 다중의 권력분립, 견제, 균형
 (“정부란 대체 무엇인가? 그거야말로 인간성에 대한 최대의 불신의 반현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대표제 공화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입법에 대해서야말로 모험적인 야심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 경계를 태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II. 각국의 예 (헌법 서문)

1. 미국(1789):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ec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참고: 미국의 독립선언문, 헌법(연방, 주),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2. 바이마르(1919): The german people united in every respect and inspired by the determination to restore and confirm the reich in liberty and justice, to serve peace at home and peace abroad, and to further social progress, has given itself this constitution.
3. 일본(1947): We, the Japanese people.....
4. 프랑스 4공화국(1946):

*이상, 헌법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의 확보에 있음을 메디슨의 증언에서도 볼 수 있다. (“헌법위원회가 직면한 곤란 중에는 어떻게 해서 자유와 공화정체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정부의 안정성과 활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였다.”)

5. 한국: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의 원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이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이상, 한국헌법의 목적은 유진오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헌법의 기본 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하려는 데에 있다.”)

III. 배경

1. 메디슨(미국헌법의 아버지)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2. 헌법의 고정성 fixy (Vattel). “조령모개는 백성에게 있어서 꺼림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악이기도 하다.”(Madison)
3. 서문 + 본문 7조 + 권리장전 10조 (수정조문 1-10) + 수정조문 11-27.
마지막 수정조문 11-27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230년 동안 불변.
4. 다중의 권력분립
 - 1) 3권 분립=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 권력분립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부유함에 있어서 중요한 세 권력부문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음이 필요하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동일한 인물 혹은 동일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
 - 2) 각부 내부의 권한분립: (“외부로부터의 억제정책을 각 부문이 그 상호관계에 의해서 서로 적당한 영역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정부의 내부구조를 구성함에 있어서 결함을 보충하는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조. 입법부: 상원과 하원. 2조. 행정부: 연방과 주정부 3조. 사법부: 연방법원과 주법원 4조.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계. (“이질적 정부가 각각 상대방을 제어 하면서 동시에 그 각 정부가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제어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 3) autocracy 행정부 + aristocracy사법부 + aristocracy상원 + democracy하원.
 (“하원만이 공화제적(민주주의 대의제) 성격을 갖는다. 연방의회하원의 하원은 그 권한을 미국국민으로부터 이끌어 낸다.”)
 (“연방의회의 상원은 그 권한을 상호 평등한 정치단체로 간주하는 각 주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다.”)

IV. 민주주의에 대한 메디슨의 우려 근거

1. 다수제 - 소수의 희생, (“만약 다수가 충돌의 이해관계로 통일되게 되면 소수자의

권리는 위험하게 된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둘 밖에 없다....”). unbalance, log-rolling, deadlock, rent-seeking, bribery, misrepresentation, 투표대상, 투표비율, “입법부에 의한 권력찬탈의 위험성.” etc.

2. 합의제(만장일치) - 동질성에 대한 대가 (비용).

V. 메디슨 우려의 현실화

독재자(지도자)의 등장. (“이들 제 권력의 행사가 다수인의 손에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태를 조금도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버지니아 주의회] 173인의 전제적인 군주는 1인의 전제군주와 똑같이 압제적으로 되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1. 파시스트 민주주의 - 민족(아리안족, 고대로마족)의 동질성 기준 - “일치단결” - 만장일치
2. 공산 민주주의 - 계급(무산계급)의 동질성 기준 - 만장일치- 알바니아
3. 신정 민주주의 - 종교(청교도)의 동질성 기준 - 만장일치
4. 메디슨의 “think the unthinkable” 1) 프랑스 혁명 - 폭력 민주주의, 공포 민주주의
2) 미국 대통령 자격 3) a President 4) a more perfect union 5) We People.
 (“We the People”은 헌법에 민주주의 역사를 반기지 않는다.“)

IV. 민주주의 이론

1. 투표의 모순
2. 민주주의 마비
3. Arrow Impossibility Theorem - “대의제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4. Goedel Incomplete Theorem -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다.”

V. 해결방안 - 다중 권력분립, 권력견제, 권력균형.

- 1) 수직형: BD는 A의 B
- 2) 원형: A는 A의 B (무한순환) $\rightarrow$ D는 A의 B $\rightarrow$ A는 G의 B

VI. 사상사

Locke, Montesquieu, Rousseau, Blackstone, Bentham, Kant, Madison, Federalists, Kelsen, Schmidt, Hayek, Arrow, Sen, Buchanan, Posner, etc.

V. Why Freedom and Liberty?

VI. 첨언

■ 정책토론회

토 론

- 남 정 욱 작가
- 여 명 서울시 의원
-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개념

남 정 욱
작가

미국 독립선언문이나 헌법에 ‘민주’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시작하기에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줄 알았다(참고로 북한 헌법은 우리 헌법처럼 길고 지루한 서문이 있으며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로 시작된다). 찾아보니, 진짜 없다. 전문은 이렇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더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 평온을 보장하고, 공동 방어를 제 공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하고, **자신과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 국민을 제명하고 미국 헌법을 제정한다(심심해서 구글 번역기로 돌려봤음).

연합, 정의, 평온, 방어, 복지, 자유의 축복만 나열되어 있다. 뭔가를 나열할 때는 원칙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나중에 쓴다. 그게 자유의 축복이다. 대체 민주, 민주주의는 어디?

1. 미국 略史

13개의 식민지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조적인 식민지가 북쪽의 메사추세츠와 남쪽의 버지니아다. 메사추세츠는 청교도들에 의해 개척되어 종교적인 성격이 짙었다. 반면 버지니아는 세속적이었다. 이들은 토지 소유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주한 사람들이 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소유에 대한 관 념**’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었다.

통일국가의 수립을 놓고 둘의 의견은 갈렸다. 상인과 제조업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메사추세츠는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과 강력한 해군력이 절실했기에 강력한 중앙정 부 또는 연방정부를 희망했다(연방주의자로 불리는 이 그룹의 아이콘이 알렉산더 해 밀턴). 대지주들의 지배하는 버지니아는 지방의 자유를 주장했다(반 연방주의자로 불 리는 이 그룹의 아이콘은 토마스 제퍼슨). 두 그룹은 양보와 타협 끝에 조지 워싱턴 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아메리칸 합중국을 탄생시킨다. 신생 공화국의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당연히 상업과 제조업의 육성만이 신생 공화국(당시로는 개발도상국)을 지탱할 방향이라고 보았다. 남부는 반발하고 종기가 커지고 부푼 끝에 4년 전쟁이 터지고 북부가 승리한다.

2. 미국의 지적 전통

미국 지적 전통의 두 가지 기본 요소는 ‘종교적 기반에서 비롯된 정신적 요소’와 ‘개혁과 정착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요소’다. 미국의 지성사학자 멀 커티는 이를 기반으로 두 개의 이상을 강조했는데 하나는 내셔널리즘이라는 이상이고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이상이다. 공통된 과거도 없고 구성원들의 문화적 배경도 제 각각인 신생 독립국에게 내셔널리즘은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반면 멀 커티가 정의한 민주주의는 통념과 조금 다르다.

‘미국 사상의 성장(1964)’이란 책에서 그는 모든 개인이 완벽하게 자신을 실현하고(자유) 그 결과 모든 개인이 사회 속에서 정당한 자기 몫을 갖는(소유), 즉 개인의 자립이 충분히 실현되는 것을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는 전제 조건이나 출발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강조한 ‘결과’라는 얘기다. 메사추세츠와 버지니아가 공유했던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소유에 대한 관념’은 이렇게 미국의 지적 전통에 유구하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청교도주의와 개혁정신에 내재한 개인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으며 언제나 개인을 사회와 국가의 중심에 두었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진다. 미국인들에게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은 신성한 것이다. 당연히 미국 역사에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같은 운동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어쩌다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다만 정치 체제일 뿐인 ‘민주정’이 이념이 되더니 이제는 변태적으로 진화하여 자유를 목 조르고 있다. 자유 대신 평등을 즐기란다. 그러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가장 나쁜 편견이다. 그것은 더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 최악의 장애물이다. 대신 한 문명이 내려앉거나 사라지게 하는 데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민주는 자유를 죽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누구인가?

여 명
서울시 의원

특히 한국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몇몇 단어가 있다. 정의, 평등,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공통적으로 좌익 진영, 그중에서도 86 운동권 세력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형이상학적이기에 제멋대로 변질되 이미 오염된 용어들이다. 정의란 대개 광장에서의 정의를 뜻하며 그것은 곧 노동자의 정의다. 평등은 앞에 ‘결과적’이라는 말이 투명 수식어처럼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평화는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 즉 주한미군철수를 뜻한다. 민주주의란 앞의 세 요소를 모두 갖고 있으며 대체 그 정의가 무엇인지 사실 모르겠다. 요즘은 ‘86운동권들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가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든다.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교보문고에서 검색을 해봤다. 2,166건이 검색된다. 그중 국내도서가 1,267권이다. ‘취업’이라고 검색해봤다. 전체 7,742권 중 국내도서가 1,790권이다. 그러니까 이나라에서 민주주의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관심사인 것이다. 웃기는 것은 내 또래의 청년들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이면서도, 아니 오히려 과잉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절박함과 확신을 갖고 있다. 딱 내 세대와 그 윗세대인 80년대생이 그렇다. 기린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과 기린을 실제로 본 사람이 싸우면 안 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86들의 이념교육을 받고 자라며 그 시대를 상상만 해본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란 어떠한 이상향과도 같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는 독재세력의 대표주자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민주세력의 대표주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날(그렇게 믿고 있는 날)이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다. ‘갑자기 강대국이 되었다.’와 같은 낮부끄러운 망상들이 대선 직후 난무했다.

문제는 86들조차 자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첫째는 그래도 순수한 이유인데, 천국에서나 통할 이상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할 동안 너희는 뭐 했는데?’하는 민주주의의 독점만 목표의식으로 갖고 있지 그 ‘민주화’라는 것이 본인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민주화인지, 아니면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인지.

어떻게 민주화가 민주화 세대만의 공인가? 민주주의는 민주화 세대의 결실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산물이며 더 엄밀히 말하면 건국세력의 지난한 노력의 결과였다. 헌법에 개인의 재산권 소유, 개인의 신체의 자유, 개인의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명시해 놓

은 최초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 만든 결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86들은 마치 전(全)세대가 자신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양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앞세우고 그 뒤로는 정반대 급부인 전체주의적 국가경영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가히 민주주의의 이름을 한 독재다. 지금 나라 꼴을 한 번 돌아보자.

정부는 ‘전통적으로 독재세력의 칼로 군림해온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권을 확대한다’며 9급 경찰공무원을 계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주 업무여야하는 9급 경찰공무원을 뽑는데 집단토론을 시키고 있다. 주제는 갖고있는 이념에 따라 명확한 찬반이 있는 것들이다. ‘시위 과잉진압, 검찰 수사권 폐지, 범죄자 신상 공개, 사형제 폐지’ 등이다. 사상검증이나 다름 없다. 인권과 탈권위를 명분으로 군의 위계질서가 엉망이 되더니 남북 분계선 철책선을 잘라 여당 국회의원에게 바치는 웃지못할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부서를 창설하며 각종 민주주의 교과서를 공급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학교 현장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용어를 일부 청소년들이 악용함으로써 공교육 몰락에 기름을 부었는데 말이다.

전대협 의장 출신의 모 의원은 지역구에 민주화 유공자들을 위한 사당을 짓는다고 한다. 여기저기 전봉준 동상이 세워지더니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민주화 유공자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5.18 유공자는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을 10% 받는다. 유공자 수가 왜 계속 늘어나냐는 논란에도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지 못한다.

수많은 비위 행위가 드러난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교육부 장관 후보가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 운동을 하느라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말인가.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했다는, 금번 지방선에서 보권선거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인천공항에서 갑질을 하다 들통났다. 감히 국회의원 나리를 못알아보고 ‘매뉴얼대로’ 신분증을 요구한 죄로 해당 직원은 잡들이를 당해야 했다. 국회의원지 직업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단다. 노무현 정신이 대체 뭔지 궁금했는데 그런 것이었나보다. 가만 보면 86들은 전두환의 독재를 쳐부수기위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본인들이 누리고 싶어 민주화 운동 그렇게 했나보다. (당연하게도 노랑리본 한창 달고다닌 부류였다.)

이제는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기사에도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보이기 시작한다. 정말로 만능이다.

민주화세력의 반민주적 모순보다 큰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가장 반대에 서 있는 전체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다. 대학이나 회사에서 자신의 정치지향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불어닥치기 시작한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사이비 패미니즘, 무분별한 난민 대책 옹호, 동성애에 대한 강요 바람 앞

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적폐를 청산한다며 정치적 정적들을 감방에 집어넣고 이전 정권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을 잘라냈다. 국가 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여차하면 소송을 거는가 하면 의회는 심의 기능과 감사 기능을 잃었다. 심지어 행정부조차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려진다. 본인들이 소수일 때 민주주의란 다양성이라더니 이제 민주주의란 다수결이란다. 정부를 장악한 세력의 역사 싱크탱크는 <반헌법행위자 인명사전> 이라는 사전을 만들어 건국 세력과 산업화 세력을 우겨놓고 있다.

이미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것이다.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민주라는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민주라는 제약조건으로 각 영역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 특히 정치권에선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홍보 용어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제 우리 사회는 민주라는 용어가 성역이 되어서, 민주를 앞세워서 집단주의적 행동을 많이 하는 현실임.
-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인가? 이는 헌법과도 연결된 이슈이므로, 발표자의 헌법과 민주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쇼크를 줄 수 있는 사실임.
 - 우리 헌법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민주가 실제로 선진국의 민주주의 헌법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사실을 알 수 있음. 우선 민주주의 대표국가인 미국의 중요한 기록인 독립선언문과 헌법에는 민주란 용어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임. 그들이 민주주의 대표적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민주라는 용어를 기재하지 않는 걸까?
 - 민주라는 잘못 사용될 때, 그 폐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민주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은 민주라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하는 국가의 정치 체제일 뿐임. 국가는 항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속성을 가지므로, 민주 이름으로 자유가 박탈당하는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임.
- 한국의 정체성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임. 자유와 민주라는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때로는 두가지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라는 가치를 앞세워서 자유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제 우리도 민주가치와 자유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미국의 예처럼, 민주라는 항상 개인가치를 침해한 역사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견제하면서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민주라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도, 자유는 민주를 침해할 수 없음. 또한 민주란 정치체제일 뿐이지, 가치 혹은 사상이 아님. 이제 우리도 민주에 앞서 자유가치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국민들에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민주란 용어를 통해 개인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현실임.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낮은 임금으로 일할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더 일할 경제적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임.
 - 소득세, 법인세의 누진구조 강화는 고소득 및 대기업에 대한 일할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이런 일련의 자유침해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는 퇴보할 것이며, 이는 우리 문명의 퇴보로 이어질 것임. 한국은 21세기엔 조금의 퇴보로 인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파탄을 가져줄 수도 있는 경제적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illegible]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비비앙차 9층(순화동)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